

새정치 혁신, 혁신위 → 평가위 바통터치

“혁신에 완성은 없고 실천만 있다”...혁신위 지각해산

최고위 회의 ‘오픈프라이머리’ 의총 상정 놓고 충돌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해산하고 조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 지도부회의에 참석, 첫 인사까지 했으나 정작 당내에서는 뒤늦은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다.

당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산을 결정한 뒤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혁신위는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며 시스템 공천, 좋은 후보 공천, 이기는 공천으로 총선 승리의 기쁨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고 자평한 뒤 “혁신에 완성은 없고, 오직 실천만이 있을 뿐”이라며 혁신안의 실천을 강조하며 공식 해산했다.

그러나 혁신위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혁신안 수정 움직임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위는 “혁신안 실천의 책무는 평가위와 조은 평가위원에게 넘어갔다”며 “평가위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와 시스템 공천 등 혁신안 실천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혁신의 길로 가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석, “정치적 선별에 의한 평가는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마찰이 일었다. 조은 평가위원장이 참석한 최고위 회의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를 놓고 지도부 간 얼굴을 붉히는 등 불협사운 모습은 드러난 것이다.

최규성 의원이 자신을 포함해 소속 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살인·강도 등 5대 중대범죄자가 아닌 당원이라면 누구나 오픈프라이머리

에 나설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표가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총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유승희 최고위원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 80명 가량이 서명했는데 어떻게 의총 안건으로 올리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수석부대표가 “오늘 의총에는 올리지 않고 다음에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논쟁이 마무리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논쟁은 표면적으로 총선 경선 때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혁신위 공천혁신안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다는 현역 의원들의 불만에서 출발한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공천혁신안의 핵심인 예비후보 도덕성 검증 강화,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지역구 전라공천 최대 20% 실시, 결선투표제 실시가 사문화된다. 혁신위가 곧바로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맹비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서명에는 비주류뿐만 아니라 주류 의원들도 상당수 동참했다. 하지만, 뒤늦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기하고

나온 것을 두고 공천 탈락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담합 내지 반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야당 내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새누리당의 지원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이미 친박(친박근혜)의 반발로 인해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공천 규정을 손질하려면 당헌·당규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데 공천혁신안이 통과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가운데) 등 혁신위원들이 19일 서울 국회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초 창당 기획위 출범...신진인사 대거 선보일 것”

신당 창당 주도 천정배 의원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9일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창당 기획위원회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신당을 이끌어갈 신진 인사들을 대거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신당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조바심을 내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국적 개혁 정당이라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 정치권

야권 창조적 파괴 필연

3자 연석회의 연대와 무관

을 바꾸기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든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호남은 물론 전반적인 민심이 이미 새정치연합을 떠났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라며 “정권 창출을 위한 야권의 창조적 파괴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통합론과 관련, 천 의원은 “저를 비롯해 박주



선 의원, 정동영 전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이 새정치연합에 복귀한다면 정권 창출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새정치연합으로

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며 신당이 야권 재편의 물꼬를 트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의 3자 연석회의와 관련, 천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는 국가적 문제라

는 점에서 야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하지만 신당 창당과 연석회의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지사 등과의 원탁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결국, 적절한 시기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전영에서는 오는 11월 창당기획위원회 출범을 통해 신진 인사들의 인제 풀을 제시하고 12월 중순 창당준비위를 띄워 정치권의 개혁적 인사들을 영입한 뒤, 내년 1월 신당 창당을 통해 본격적인 야권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새누리 의원도 책임론 거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19일 전체회의에서는 한 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위한 4대 핵심기술 이전이 무산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에 대해 “KF-X 사업의 4가지 핵심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방미에서 얻어낸 것이 전혀 없다”며 “향후 워킹그룹(협의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고 이와 무관하기 때문에 얻어낸 것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같은 당 백근기 의원은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 과정에서 밀고 당기더라도 해야 했다”며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기술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미국 장단에 진출 것

이 아니고 우리 장단에 미국이 춤추는 기술력 확보에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을 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KT-X 기술 이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방위비분담 등의 논의가 일상적인 수준에서 그쳤을 뿐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한 장관은 “방미 중에 KF-X 4개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거론한 것은, 기술이전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기본 자세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4가지 핵심 기술 이전에 제한된다는 것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인식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휴대전화 해킹 의혹’ 현장 검증 무산

정보위 내일까지 경찰청·기무사·국정원 국감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정보당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다.

정보위는 19일 경찰청과 국군 기무사령부를 시작으로 20일에는 국가정보원, 21일에는 국방정보본부에 상대로 국감을 실시, 대북 정보활동을 점검·평가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적절성 등을 따질 계획이다.

최근 열병식을 개최한 북한의 군사력과 핵무기 및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무기개발 현황,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근황, 한반도를 중

심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정원의 휴대전화 해킹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된다. 다만 21일 진

행될 예정이던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 현장검증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정원이 감청 장비의 로그 파일은 국회의원만 열람할 수 있고 대동할 전문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장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정보위와 운영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를 맡은 의원이 겸직해 지난 8일 본 국감이 종료되고 나서 국감을 따로 실시한다.

운영위원회는 오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 이어 23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을 대상으로 각각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10·28 재·보선 투표소 344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선 선거 투표소 344곳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까운 사전투표소와 선거 당일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안내했다.

선관위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일 전날까지 신청하면 투표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이동 차량과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했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권·공약과 재산·병역 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이 기재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담보 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